

무기 수출 늘리려는 日…방위장비 청 지원 조직 신설 검토

EU 재무장 자금지원 '세이프' 참여 타진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 제한 규정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방위장비 수출 촉진을 담당할 새로운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방위성 산하 방위장비청에 방위장비 수출 촉진과 수출 후 수리, 부품 교환 등 유지관리 업무 담당 조직 신설을 검토 중이다.

새 조직은 방위장비의 수출 용도 제한 내용이

담긴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개정 후 출범하게 된다.

현재 일본 정부와 여당은 구난, 수송, 경계, 감시, 소해(掃海·바다의 기뢰 등 위험물을 없앰) 등 5가지 용도에만 수출을 허용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일본유신회가 지난 10월 연정 수립에 합의하면서 이 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철폐하기로 약속한 데 따라 빠른 속도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래 일본은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다가 제2차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4년 방위 장비 이전 3원칙을 마련해 5가지 용도 등 일정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 뒤 공동개발이나 라이선스 보유국에 대한 수출 등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수출 제한을 더 완화했으나 여전히 제한 규정 때문에 수출이 어렵다는 불만이 방산업체 등에서 제기돼왔다.

마이니치신문은 "5가지 수출 용도 제한이 없어지면 호위함이나 항공기 등 정기 점검이 필요

한 방위장비 수출도 가능해지는 만큼 새 조직은 점검, 수리 체제도 뒷받침해 중국의 군비 확대를 우려하는 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무기 공동 구매 프로그램 '세이프'(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 참여도 타진했다고 니혼케이자이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세이프는 EU 회원국들의 재무장 자금 조달을 뒷받침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무기를 공동구매 하는 회원국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로 1천500억유로(약 256조원) 규모다.

제3국이 직접 대출받을 수는 없지만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거나 EU 가입 후 보국인 경우는 무기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EU와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맺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EU 회원국 승인을 받는 대로 정식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라며 "일본 방위 산업의 유럽 시장 개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中대만포위훈련 “북쪽해역 장거리 실사격”

“훈련범위 기준 역대 최대 규모”

941개 항공편·승객 10만명 영향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 대(對)대만 무기 수출에 반발해 '대만 포위 훈련'을 개시한 중국군이 훈련 2일차인 30일 대만 북쪽 해역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탄 사격 훈련을 했다.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공지에서 동부전구 구축함·호위함과 전폭기 등 병력이 대만 섬 남북 양단 해역에서 겹증·식별과 경고·퇴거, 모의 타격, 해상 돌격, 방공·대잠수함 등 훈련에 나섰으며 "해·공군 협동과 일체화된 봉쇄 능력을 검증했다"고 발표했다.

동부전구는 전날 육·해·공·로켓군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사방으로 포위하는 형태의 훈련을 시작했다.

해·공군의 전투 대비 순찰과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만·지역 봉쇄, 외곽 입체 차단 등이 중점 훈련 목표라고 동부전구는 설명했다.



중국군이 30일 오전 대만에서 가까운 중국 푸젠성 평tan 섬에서 발사한 로켓 모습.

/AFP=연합뉴스

동부전구는 이어 "30일 오전 9시 동부전구 육군 부대가 대만 섬 북부 관련 해역을 대상으로 원거리 화력 실탄 사격을 실시했으며, 예상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이와 관련, 대만에 가장 가까운 본토 지역인 푸젠성 평tan에 있는 자사 기자들이

이날 오전 9시부터 최소 10발의 로켓이 발사돼 날아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동부전구는 30일 오전 8시-오후 6시 대만을 둘러싸고 해상 실탄 사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해양안전국이 전날 실사격 훈련 구역 두 곳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이번 '정의의 사명 2025' 훈련은 훈련범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됐다고 전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까지 24시간 동안 대만 인근에서 중국 군용기 130대와 중국 함정 22척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함정 가운데 14척은 중국 해군 소속이고 나머지 8척은 불특정 정부 함정이라고 부연했다.

대만 교통부 민항국은 중국군이 예고한 실사격 훈련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만해협 주변에 임시 위험 구역 7곳을 설정하고 항공기 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선 일부가 지연·취소되는 등 항공편 총 941편과 승객 10만명이 영향받을 것이라고 민항국은 부연했다.

/연합뉴스

막대한 부채를 둘러싼 종전 시장 우려를 더 부풀렸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막대한 예산 손실이 축발될 수 있어 자칫 30조달러(4경3천조원)에 달하는 시중 미 국채를 관리할 정부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대형 은행과 자산운용사 임원 10여 명을 취재한 결과 최근 평온해 보이는 채권 시장 뒤편에서 미 행정부와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장 안정에 애간장을 쓰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美국채시장 휴전, 아슬아슬 위기 상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봄 겨우 봉합한 미국 국채 시장과의 갈등이 되살아날 조짐이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4월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국 국채 시장에선 전례 없는 '페닉'이 발생했다. 대표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

깜짝 놀란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관세 기조와 정책 메시지를 대폭 완화해 시장 심리 달래기에

나섰지만, 이 '휴전'이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것이 적잖은 시장 참가자들의 평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균열의 조짐은 올해 11월 5일 나타났다. 이날 미국 재무부가 국채 장기물의 추가 발행을 시사하고 동시에 연방 대법원이 트

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위헌 여부 심리를 시작하자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갑자기 6bp(1bp=0.01%포인트) 치솟은 것이다. 이는 최근 수개월 사이 최대 상승 폭이었다.

국채 장기물의 추가 발행 방안은 미국 정부의

한국군이 30일 오전 대만에서 가까운 중국 푸젠성 평tan 섬에서 발사한 로켓 모습.

/AFP=연합뉴스

1분에 5회 회전…지구중력 50% 구현

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구조물은 분당 약 5회전하며, 이를 통해 가장 바깥쪽에서 발생하는 인공 중력은 지구 표면 중력의 약 50% 수준이다.

러시아의 우주개발 기관 '로스코스모스'는 기

존 ISS의 러시아 관리 부분을 일부 활용해 '러시아 케도 우주정거장'(ROSS)을 건설할 계획이며, 이번에 공개된 에너르기아 특허가 여기 쓰일 가능성이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국(ESA)은 달 주변을 도는 '루나 케이트웨이'의 건설에 적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나온 러시아 측 구장은 미국의 우주개발 스타트업 '베스트'(Vast)가 놓은 '헤이븐' 구장과도 유사하다.

베스트는 시험용 전자기기와 기계를 실은 소형 우주선을 올해 11월 발사했으며 내년에는 시험 모듈을 궤도에 올릴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이런 구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텔레그라프는 전했다.

/연합뉴스

전국 전지역 6만배송 (기타 낙후지역 배송비 추가 요금 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등록번호 : 2023-광주광산-0025

대출상품비교

최저금리, 최대한도 다양한 상품을 한번에 비교하세요.
직군, 소득에 맞는 금융사 안내를 도와드립니다.

쉽고 빠르게 승인 가능한 씨엔에스 주력 상품 리스트!



사업자대출
정책자금 1억한도
금리2%



직장인신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담보대출
아파트, 단독주택,
차량 담보 대출
모두 가능



채무통합대출
4대가입, 미가입 직장인
모두 가능

상담전화 | 010-3929-1403